

##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에 대한 해관 조사 전국적으로 실시 개시

2018년 해관의 조사 작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조사로 인하여 약 74억 위안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였고 가격심사로 인하여 약 140억 위안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1.9만 개의 신용 불량 기업에 대하여 연합 징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로열티에 대한 특정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2만여 개의 기업이 자진 납세 또는 관세 수검하였다.

2019년, 해관은 지속적으로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화하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조사 및 심사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후속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통합조사 개혁을 심화하여 조사업무의 성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관리제도를 연구·추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규범화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중점 산업, 중점 분야에 대해 특정조사 업무를 진행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해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종전 로열티에 대한 특정조사 상황과 결부하여 전국 해관은 이전가격거래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 경영활동의 중요한 문제이며 각국 세무기관과 해관이 동시에 주목하는 중점 대상 거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무기관과 해관이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관점(적용방법, 대상, 범위, 결과)이 완전히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다. 세무기관은 주로「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고 해관은「WTO 가격심사협정」에 의거하며, 세무기관은 기업이 일정 시기 동안 특수관계거래의 통합거래 이익률의 높낮이를 주목하지만 해관은 거래별 거래가격의 진실성, 합법성에 더욱 주목한다. 징수하는 세무종류 및 그 과세표준이 상이함 따라 세무기관은 기업의 특수관계거래가격의 책정이 높은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외로의 이익 이전에 주목하고, 해관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단계의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누락 여부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두 정부기관의 상기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이전가격문제가 더욱 도드라진다.

많은 기업들이 세법 각도에서만 이전가격방법을 수립하고 있지만 수입 재화에 납부 세액을 간과하고 있다. 해관이 기업의 이전가격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와 수입 증치세 추가 납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기

추납 수입 증치세는 현지 세무기관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부인될 가능성도 존재다. 또한, 해관은 이자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관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강등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입 통관 시간 지연, 더욱 엄격한 서류 심사 및 수입 재화의 검사율, 더욱 빈번한 가격 심사를 유발할 수 있다. 해관이 가격심사를 할 때 기업에 이전가격문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량의 수출입 거래를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이 해관에서 수입가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체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내부조치를 취하여 관세 거래가격의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세무기관과 해관 두 정부기관의 요구를 모두 고려하여 양측 동시에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019.04

CTAC GROUP